

“규제 없는 캔버스에 미래를” AI 메카의 실험

모두의 AI 광주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크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기술혁신을 논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이 통찰은 2026년 현재, 광주에서 가장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는 이제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실증도시’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미래 기술 시험장으로 탈바꿈했다.

기업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펼치는 이른바 ‘규제 프리(Regulation-Free) 실증 스테이지’의 막이 올랐고 광주에서 열렸다.

◆하드웨어와 실증 장비의 결합

광주가 ‘AI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누가 뭐래도 수준 높은 인프라다.

북구 첨단3지구의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며, 고성능 GPU 자원을 기업에 제공해 연산 병목 현상을 신속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동을 시작한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는 광주의 기술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 시설은 실제 차량을 돔 형태의 가상 환경에 배치해 눈비가 내리는 악천후나 돌발 사고 등 위험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검증한다.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NPU·자율주행·투자유치 3박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넘어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AI G3 주춧돌로

완성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메가 샌드박스’...도시 전체가 연구소
광주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단지를 넘어 도시 전역을 ‘AI 메가 샌드박스’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규제 샌드박스 특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면, 광주가 추진하는 모델은 도시 전체를 상시적 실증무대로 삼는 ‘포괄형 실증 플랫폼’에 가깝다.

실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주 전역에 200여 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심 환경에서 직접 생성한 데이터값을 확보해 상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시민 체감형 AX(AI 전환)도 주목된다. 제조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이 AI와 결합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AI가 환자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진단을 내리고 공장에서는 공정효율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실증이 이뤄진다.

순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8일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허무는 과정”이라며 “AI산업에 필요한 실증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300개사 돌

파, 대규모 투자

규제가 사라진 자리엔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광주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직접 광주사무소를 개설한 AI 전문 기업은 이미 300개사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LG이노텍과 체결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은 광주 실증 전략의 유효성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LG이노텍은 광주사업장에 차량용 제어모듈(AP모듈)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광주를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기술과 공법이 탄생하는 모체(母體) 공장, 즉 ‘마더 팩토리’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업 유치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투자 유치액 1000억원 돌파와 더불어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의 교육과정인 ‘Arm 스쿨’이 설립돼 연간 140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등 경제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더 큰 꿈을 향해...NPU 센터와 글로벌 AX 벨리

광주는 이제 AI 2단계 사업(AX 실증벨리)을 앞두고 있다. 총 6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차세대 AI 반도체인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의 컴퓨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GPU보다 효율적인 NPU 실증거점이 마련되면, 광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가 결합된 ‘AI 풀스택(Full-stack)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마중물 예산을 통해 도시 규모 실증모델 기초연구가 시작됐고, 이는 앞으로 국산 NPU반도체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도시 곳곳을 누비는 일상을 앞당길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서울 미래컨퍼런스 기초연설과 대통령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전 분야의 혁신 실험을 열어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대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례 없는 실험인 만큼 실증기간이 종료된 후 규제가 부활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 현상을 방지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체계 구축 또한 절실하다.

또 실증 단계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자산화’ 전략도 요구된다.

조선대 이민창 교수진은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설계와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술이 완벽해도 시민이 수용하지 않거나 기존 산업과 충돌하면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며 “실증 데이터는 그 갈등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광주 인공지능(AI) 실증벨리. /뉴시스



광주 북구 오동동 광주인공지능지능벨리에서 설치된 드라이브 시뮬레이터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기술’과 ‘혁신’을 선택한 광주의 도전은 이제 지방 소멸 시대의 새로운 생존 모델이 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도시 전체를 미래 기술의 전시장으로 내어준 광주의 실험은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교통비·생활비·양육비까지 덜어 준다... 광주시, ‘설 선물’ 민생패키지 총출동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 선물’ 같은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비롯해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지(G)-패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민들이 바로 챙기면 좋은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현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광주상생카드(체크·선불)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상시 할인(캐시백)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기본할인 10%에 추가 10%

최대 20% 환급 상생체크카드·출생축하카드 등 바로 체크 청년 구직활동 수당·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기 2026년 지금 바로 챙기면 좋은 ‘광주형 체감정책’ 총정리

가 더해져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는 어린이 무임, 청소년 반값 혜택을 더해 성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은 두 제도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별도 선택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으로 포함해 지(G)-패스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가 ‘모두의 카드’에서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록 했다. 정부 기준보다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한 광주만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50만원이 충전된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첫째아는 출생 직후부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부모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로, 출생일 기준 3개월 전

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비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오른다.

청년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 광주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합

10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0.5%로 낮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이 일정기간 근속하며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함께 지원해 만기 때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시는 설 이후 신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미래 설계를, 기업에는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 가사, 식사, 동행 등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통합돌봄 방면으로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했다. /전광훈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복성